예상 뛰어넘은 이탈표에 충격…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 40명 육박
압도적 부결 자신했던 민주당 술렁
친명-비명 당내 분란 고조 전망
지역 정치권도 정국 향방에 촉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표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단일대오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결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 표에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상황을 피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향후 거취를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도 예상을 뛰어넘은 표결 결과에 놀라움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제적 의원 297명 가운데 149명 이상의 찬성해야 되는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나와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으로 집계됐다. 충격적인 것은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 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지난해 12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상이하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은 이탈 표에 민주당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기는 했지만 이탈 표가 예상을 뛰어넘어 충격"이라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명계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싶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가 결집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비명계 진영에서도 이탈 표 규모가 예상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경고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 위기 상황에서 무더기 이탈 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대표와 친명계가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비명 성향의 의원은 "이탈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도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 쪼개기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친명 진영과 비명 진영이 정면충돌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이 반란표를 찾는다며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좌표 찍기에 나서면서 당내 분란이 더욱 커지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지율의 향배가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하락한다면 이 대표가 버틸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예상을 뛰어넘은 민주당 이탈표가 나온 표결 결과에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투표가 당론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표결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하게 사퇴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체제가 자리를 잡으면 당 지지율이 더욱 상승하는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과 당내 분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지 않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부결' 또는 '무효' 여부가 불분명한 두 표 때문에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투표용지 해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류 원내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인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 6석의 정의당은 그동안 당론에 근거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연합뉴스

민주 "정순신 낙마, 검사 끼리끼리 해먹다 발생한 인사참사"

"인사 망사, '검사 하나회' 등장"
윤 대통령 사과·검증 문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수사본부장이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부실 인사 검증'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경수사권 조정 의지는 커녕 무리하게 검찰 편향 인사로 사정기관을 채운 부작용이 결국 '역대급 인사참사'로 증명됐다"며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검찰 끼리끼리 해 먹는 인사참사"라고 비난했다.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끄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정조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검증은 안 한 것이냐. 안 했으면 직무유기, 못 했으면 무능"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공분이 큰 학교 폭력 문제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출신 '아빠 찬스'로 연결되며 공정 이슈까지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표 의장 양곡처리법 여야 합의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수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대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